

# 전주시, 버스 주정차단속 시스템 특혜 시비

### 교통안전과 발주 의뢰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적시해 특정 업체 탈락 시키려한 의혹사

#### 기술력 갖춘 회사가 지사 없어 사후관리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

전주시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단속 시스템' 물품의 조달구매 과정에서 담당 과에서 특정업체 선정에 앞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4억여원을 들여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대당 1900여만원) 40여대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이달중 절반 가량을 구입할 예정으로 지난 10일 교통안전과에서 재무과에 발주를 의뢰했다.

그러나 교통안전과는 재무과에 발주를 의뢰한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을 적시해 특정 업체를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는 해당 제조사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과가 지난 10일 재무과에 카메라 구입을 요청하는 공문서에서도 N사와 L사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이 공문서에는 'N사는 지사가 없어서 사후관리에 어렵다는 내용을 적시해 상대적으로 L사가 유리하

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사실과는 정반대로 N사는 호남 대구, 부산 충청지사 등이 설치돼 있는 반면 등기부상 L사는 국내에 단 한군데의 지사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허위사실을 공문서에 기입 작성해 재무과 계약담당 부서를 혼동케한 사실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N사 제품으로 실제로 이를 단속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 경제교통과는 N사의 카메라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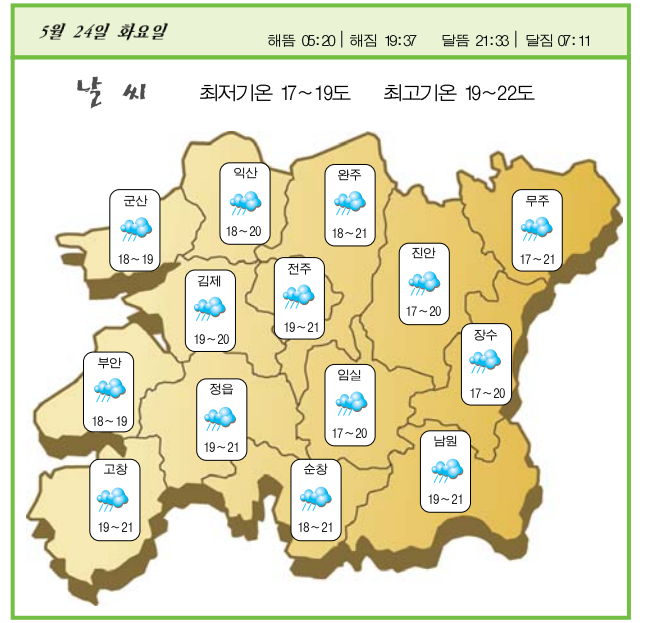
또한 N사 카메라는 도로교통공단에

서 99.1%의 변호인식률을 공인받은 것은 물론 버스 내부 탑재형인 반면 L사 카메라는 변호인식의 자체기능이 없어 타회사 제품을 빌려 쓰는 등 기술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제조사의 기술력은 거기서 거기'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협세를 낭비하려 했다는 사실에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병집 교통안전과장은 23일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하지 않았다"며 "담당 직원을 통해 양사에 대해 제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용기 기자



## 도교육청, 일반고2학년 대상 진로진학포트폴리오프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캠프를 운영한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1~2차례씩 권역별 순회 형태로 진행되는 진로진학 캠프는 총 300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의 미래 설계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적성(APL) 검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방향과 진로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전북진로교육지원단 교사 10명이 학교생활기록부와 대입전형 지원유형 개발법 등을 통해 개별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캠프에는 과목별 학습코칭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죄송합니다

남원의 한 중중장애인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가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23일 해당 시설 관계자들이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전교조 죽이기 동참 전북교육청 규탄"

민주노총전북분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입자 직권면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전북분부는 23일 "전교조 죽이기에 동참한 전북교육청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분부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전국 각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입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그대로 이행했다"며 "이는 지난 1989년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교사들을 해직하는데 이어, 27년 만에 또다시 교사들을 집단 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김 교육감은 휴가를 냈고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면서 "도교육청은 징계

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획적으로 징계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북분부는 "김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을 발미로 징계위를 강행해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의 범의노조 판결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입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입자 3명의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고민형기자

## 전주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사전용역 착수

### 표준운송원가 산정·경영실태·재무구조 분석 등

전주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에 앞서 택시운송업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실태, 재무구조 분석 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전주시는 오는 2017년부터 전면시행을 앞둔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운수종사자 임금 체계 설계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택시업

계 제정·경영실태, 사납금, 운영실태, 운송원가 등을 분석하고, 전액관리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정 협의회를 통한 택시업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이에 맞는 운수종사자 임금 체계 설계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과 함께 택시업계 관계자(노·사 포함)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광역지자체를 방문해 선

진사례를 벤치마킹, 전액관리제 시행 전·후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해 사전 준비 작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 제도로, 사납금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5년에는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제정돼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16년 10월부터,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는 2017년 10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전액관리제 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전액관리제 전면시행을 위해 최근 2017년 전액관리제 시행을 목표로 한 이행요청서 중재인을 마련해 협의의 틀을 이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활용한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기업경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된 근로환경 제공은 물론 노·사관계 개선에도 이바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교육학술정보원 정보 공유 협약 체결

"남녀노소 누구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지식의 바다를 만들어 갑시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과 고등교육 정보 공유와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20일 전북대 본부 회의실에서 이 총장과 한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한 강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학습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기타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우수한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나 무한하게 이용하는 대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의 이러한 협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양 기관의 이번 협력이 지식 공유와 확산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국립승안사당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